

대선 후보등록 마감… 국민의힘 ‘4강 경쟁’·민주당 ‘3파전’

한동훈, ‘3·4·7’ 성장비전 제시
나경원, G5-AI강국 공약 발표
홍준표, 정치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
김문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방문
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출마
野5당, 내란세력 제집권 저지 연대

거대 양당의 제21대 대선 당 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국민의힘 주자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며 1차 경선 통과를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주자 2명의 3파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2차 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를 추리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은 빠르게 자신의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성장, 세 부담 완화, 복지, 물가 안정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3·4·7’ 성장비전을 제시했다. ‘3·4·7’ 성장비전은 AI G3(세계 3대 AI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G5-AI강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AI 공약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막고 있는,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부터 국회에서 처리하길 촉구한다”며 “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거짓말 공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고 최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



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②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③ 김문수(왼쪽)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 현안 관련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④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1% 높여 국민 소득 4만불 시대를 이루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서는 ‘1·4·5’ 비전도 제시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 합류했다. 이만희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 강승규 의원이 상황실장, 박상웅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 임종득 의원이 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한 전 대표와 나 의원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 대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조기대선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 한 전 대표 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그 발언은 (나 의원) 계엄을 옹호하는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오늘의 조기대선을 만든 후보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국가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를 폐지하는 대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서울 상암동 소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된다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뒤로 민주화도 안됐고 거꾸로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광주에서 피 흘리는 것을 봤다”며 “박 전 대통령 땀 총을 써서 누가 사망한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모두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국민들이 민주와 운동한다는 이름으로, 두 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않고 교육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하는 3파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고,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직접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을 통해 헌정을 지켜낸 헌정수호세력

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혁명에 이은 빛의 연대, 연정을 통해서만 다음 대선 이후 들어설 대선 승리 통해 들어설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1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다시 방문해 실종자 수색을 당부했다.

한편,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원탁회의를 열고 헌정 수호세력이 내란 세력 제집권을 저지하자며 서로 연대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특검법 실시,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대선 직후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을 합의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최상목 “美 상호관세 부과 최대한 유예해야”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이완규·함상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한덕수 대행, 트럼프와 협력 합의
조선, LNG, 무역균형에 관심 보여
시급현안 중심 12조 추경 제출 예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해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 것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로 대결과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큰 원칙을 합의했고 양 정상은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기반해 경제안보전략TF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오전에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주재했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시피 미국발 충격이 있다”며 “관세가 현실로 됐을 때 영향받는 업종을 지원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장관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2조원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후 물러나게 될 윤석열 정부를 ‘큰 선물을 받았는데,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간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가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률, 세수, 조세 부담률, 가계소비 증가율, 기업투자,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 자영업자 폐업 수치 등이 문재인 정부 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는 세가지”라며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2022~20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였다. 물가상승률이 6%가 넘었고,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행 때 오버슈팅(균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다”며 “부채에 의존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8년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 자체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기는 없지만 체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민주당 “한 대행, 임명 권한 없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진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서예진 기자 syj@